

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현황과 발전방향

이력관리제도 도입 배경

2017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의뢰 사업 총 4,851건, 총 사업비 49조 8,285억원

-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방재정이 양적인 측면에서 성장함에 따라 지방예산의 계획적·효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투자심사제도(지방재정법 제37조)가 도입됨
-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사업계획에 대해 자체 또는 상급기관(광역시도 또는 행정안전부)에 심사를 의뢰하며, 통과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함
- 2017년 기준 지방재정투자사업에 의뢰한 사업은 총 4,851건으로 2015년 대비 54% 증가하였으며, 총 사업비는 49조 8,285억원에 달함

투자심사 이후 재정손실 발생 문제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

-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, 투자심사가 통과된 이후의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도 모니터링이 어려우며,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추적 및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임
- 이에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도입(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)하여 사업 추진단계별로 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함
- 또한 민원, 예산 미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계획이 바뀌거나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돼 재정손실이 있는 사업, 당초 목적인 성과 달성이 어려운 사업 등에 대하여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지원함

이력관리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

이력관리는 크게 3단계(①이력관리 DB구축→②중점관리사업 선정→③자체관리계획 수립)로 구성

- 이력관리 대상 및 사업정보 DB 구축
 - 이력관리대상은 '투자심사 매뉴얼'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통과(적정, 조건부)사업과 500억원 이상의 자체심사 통과사업으로, 해당사업에 대한 단계별(준비→추진→준공) 사업정보를 기록·관리하기 위해 DB를 구축함
 - * 사업정보: 사업기간 및 주요 일정, 사업위치, 투자심사결과(적정 또는 조건부), 조건이행 여부, 사업명 및 규모, 총사업비, 연차별 재원조달 등



〈그림 1〉 이력관리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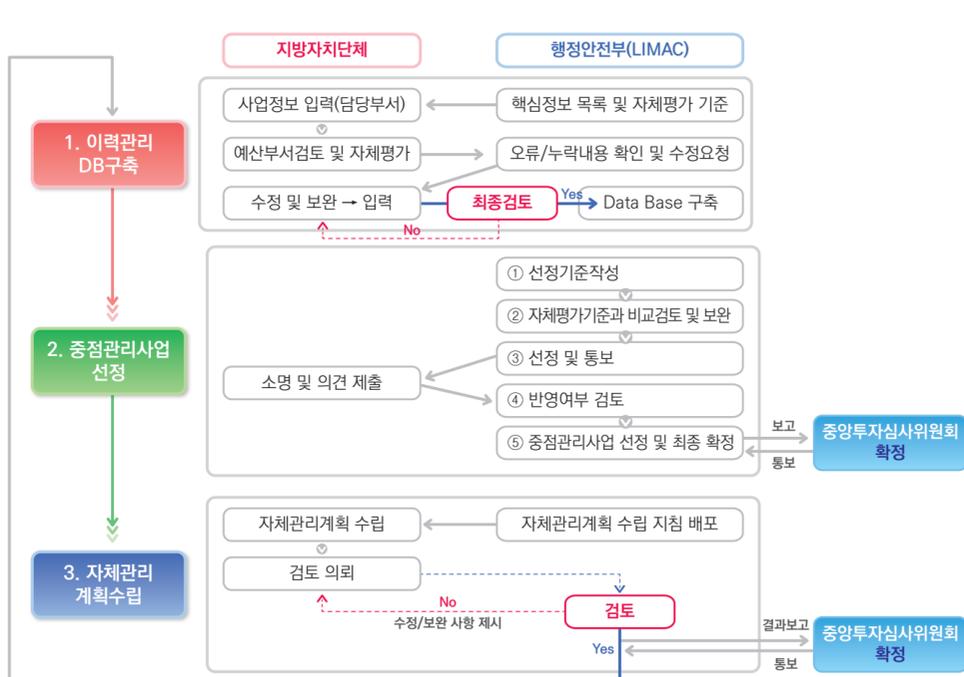
- 사업정보는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가 e-호조를 통해 직접 입력하며, 이때 추진 중인 사업의 집행실적 및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(사업비 증가 여부, 사업내용 변경 여부, 사업기간 변경 여부 등)를 작성하여 스스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진단토록 함
- 중점관리사업 선정
 - 2013~2017년 이력관리대상 사업 중 사업규모 증가, 계획 미비 등으로 인해 당초보다 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수는 전체 사업의 1/3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

〈표 1〉 계획대비 사업비 증가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, 건)

연도	사업비				사업비 증가 사업수	전체 사업수	비중
	당초 사업비	변경된 사업비	증감액	증감률			
2013	4,378,859	4,937,568	558,709	12.8%	52	154	33.8%
2014	3,248,797	4,199,824	951,027	29.3%	77	251	30.7%
2015	4,923,575	5,526,772	603,197	12.3%	81	249	32.5%
2016	5,064,548	5,664,666	600,118	11.8%	109	288	37.8%
합계	17,615,779	20,328,829	2,713,050	15.4%	319	942	33.9%

- 사업비 변동 외에 민원이나 소송/분쟁이 발생한 사업, 이로 인해 사업내용이나 규모가 변경된 사업,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일정상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별도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
- 따라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(이하 LIMAC)에서는 당초 대비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 중 쟁점 사항이 있어 향후 진행상황에 대한 추적 및 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 후보군으로 선정함
- 중점관리사업 후보군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명 기회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,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, 중점관리사업을 최종 결정함
- 자체관리계획 수립
 -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사업의 문제사항에 대하여 개선 방안 및 향후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함
 - 또한 한번 수립된 자체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자치단체가 매년 이행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, 행정안전부와 LIMAC이 이를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



〈그림 2〉 이력관리제도 추진절차

2018년 기준 이력관리대상 사업은 총 1,324건으로 관련 DB 구축 완료

- 2018년 이력관리대상은 2013~2017년에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며, 이 중 2017년 사업은 아직 계획 단계이므로 투자심사 당시 사업정보에 대해서만 DB를 구축하되, 2013~2016년 사업은 2018년 기준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함
 - 2013~2016년에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942건이며, 2017년 신규로 투자심사 통과한 사업(준비단계 사업)은 382건으로, 총 1,324건의 이력관리대상 사업의 사업정보 DB가 구축됨
- 제출된 사업정보를 검토한 결과, 준비단계의 사업은 투자심사의뢰서와 상이한 내용으로 제출한 경우가 상당하였으며, 추진단계의 경우 사업정보를 일부 누락한 경우가 다수 발견됨
- 그러나 현재 수행체계 하에서는 사업정보 오류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으며, 주요 사업정보가 누락된 사업이 오히려 중점관리사업 선정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향후 이력관리체계의 핵심인 사업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

이력관리제도 발전 방향

- 이력관리제도는 2016년부터 LIMAC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나,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존재함

주요 사업정보 DB구축 수행 체계 개선

-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e-호조시스템을 통해 직접 사업정보를 입력하게 되어있어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부서 및 시도 상위기관의 데이터의 확인, 검토,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DB구축 오류 문제가 큰 실정임
- 2018년에는 한시적으로 투자심사의뢰서 정보를 토대로 수정할 수 있는 사업정보의 경우 LIMAC이 직접 사업정보를 수집하여 DB를 구축함
-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 경감 및 DB의 정확성 개선 차원에서 적어도 당초 사업계획정보 입력의 업무수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LIMAC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에 검토가 필요함

이력관리 전담 관리 기관 지정

- 현재 LIMAC은 실질적으로 이력관리 업무의 전반을 관리하고 있으나, 매뉴얼 상에는 중점관리사업 선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
- 이에 따라 이력관리를 위한 사업정보 접근 및 수집 권한, 중점관리사업 선정, 자체관리계획 검토 및 이행결과 검토 등의 업무수행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
- 향후에는 이력관리 DB구축 절차 복잡성과 업무 효율성 개선,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 담당자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LIMAC을 '투자사업 이력관리 수행기관'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

이력관리대상 확대

- 장기적으로는 재정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500억원 이상 사업뿐만 아니라, 그 이하 금액의 사업에 대해서도 이력관리가 필요함
- 현재 2017년 총 4,400건의 투자심사 통과사업 중 382건만이 이력관리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
- 특히 자체심사사업의 경우 2017년 통과된 사업수만 3,978건, 사업비가 24조 3,061억원에 달하나 이력관리대상에서는 거의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